V 정책방안 및 산업전략

정년연장은 단순히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개편이 아니라 근로기간과 소득활동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는 임금·고용체계의 변화를, 연금시장에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적립·운용 및 수령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사업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정책변수이다. 제2장에서는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시장의 현황과 정년연장에 따른 연금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정년연장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임금피크제 신규 도입 사업체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연금 유형 변화와 보험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년연장과 퇴직연금 유형 변화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보다는 변화의 방향성과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해외 사례에서는 근로기간 연장과 함께 사적연금의 가입·적립기간 확대, 장기 자산운용 강화, 연금수령방식의 다양화 및 장수위험 관리 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정년연장이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적연금시장의 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의 사업모델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개혁 과제임을 보여준다.

1. 정책방안

첫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을 기업과 근로자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직무체계 개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법정 정년의 일률적인 상향만으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비용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종, 기업규모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직무·숙련·성과 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체계 개편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대응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 고령자 고용지원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제도 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문에서도 기업규모별 임금피크제 도입률의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

둘째, 근로기간 연장이 사적연금의 추가적인 노후자산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적립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계속고용이나 재고용 과정에서 퇴직연금 가입과 부담금 납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퇴직 이후 IRP 이전과 추가 적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발생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추가적인 노후저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 납입에 대한 세제유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점과 퇴직연금·개인연금의 수령시점을 연계하여 근로–퇴직–공적연금 수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다층 노후소득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이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연금과 달리 직접적인 제도효과라기보다 소득창출 기간 확대와 장수위험을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 운용체계를 장기 자산운용과 은퇴소득 형성 중심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간과 적립기간이 연장될수록 장기간 누적되는 운용성과가 노후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특히 DC형과 IRP의 확대는 가입자가 운용성과와 투자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장기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높인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애주기형 자산배분을 확대하는 한편,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위험조정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운용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입자의 투자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문서비스와 함께 은퇴시점에는 적립된 자산을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및 인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정년연장 정책은 법정 정년의 단순한 상향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고용과 임금·직무체계 개편, 사적연금의 가입·적립 연속성 확보, 장기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기간의 연장이 단순한 고용기간 증가에 그치지 않고 노후자산의 추가적인 축적과 안정적인 은퇴소득 확보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연금상품과 장기 자산운용 및 은퇴소득관리 기능이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이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표 V-1〉 정책방안 요약

추진과제	핵심 내용	기대효과
정년연장·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계속고용의 단계적 추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 고용안정 및 기업 부담 완화
근로기간 연장과 연계한 사적연금 적립체계 구축	퇴직연금 가입·적립 연속성 확보, IRP·개인연금 추가 적립 및 공·사적연금 연계	소득공백 완화 및 노후자산 축적 확대
장기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체계 고도화	디폴트옵션, 생애주기 자산배분, 장기성과 관리 및 연금수령체계 개선	장기 운용성과 및 노후소득 안정성 제고

자료: 저자가 작성함

2. 보험산업 대응전략

정년연장에 따른 사적연금시장 변화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와 함께 사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근로기간의 연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적립기간을 확대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DB형에서 DC형·IRP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변화할 경우 DB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보험업권에는 경쟁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제3장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현행 업권별 시장점유율이 유지될 경우 DB → DC 전환에 따라 보험업권에서 일정 규모의 적립금 순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시에 개인연금시장에서도 보험업권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펀드·ETF 등 투자형 상품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장기 자산운용과 함께 종신연금 및 장수위험 보장이라는 다른 금융업권과 차별화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대응은 단순히 투자수익률 경쟁에 참여하는 데 그치기보다 장기 자산운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 고유의 보증·장수위험 관리 기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은 수익률 경쟁에서는 투자형 상품보다 불리할 수 있으나, 종신연금과 장수위험 보장에서는 차별적 기능을 갖는다.

첫째, DC형·IRP 확대에 대응하여 장기 자산운용 및 운용관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3장의 분석은 DB → DC 전환이 보험업권에 단순한 적립금 감소가 아니라 DB형에서 이탈하는 자금을 DC형에서 얼마나 다시 유치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공급에 편중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실적배당형 상품, 생애

주기형 자산배분 및 글로벌 분산투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디지털 플랫폼, 가입자 자문 및 계좌관리 등 운용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증권·은행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보험회사가 DB와 DC 역량을 결합하거나 운영관리와 보험상품 공급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투자성과와 보험의 보증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연금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적립단계에서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해 투자성과를 추구하되,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투자와 보증을 결합하는 상품구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연금에서는 종신소득보장, 부분인출 및 의료·장기요양보장 등을 선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수위험 관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투자성과만으로 경쟁하기보다 자산축적과 노후소득 보장을 결합하여 보험상품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적립 중심의 사업에서 수령단계까지 포괄하는 은퇴소득관리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근로기간이 연장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적립자산이 증가하면 은퇴 이후에는 이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인출하고 종신소득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연계하여 가입–적립–운용–인출–연금화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가입자의 자산규모와 예상수명, 위험선호 등을 고려한 은퇴소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단순한 연금상품 공급자를 넘어 생애 전반의 노후자산과 소득흐름을 관리하는 연금서비스 사업자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넷째, 보험 고유의 장수위험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연금위험 인수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DB형 연금부채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PRT와 Buy-out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며, 장수스왑과 재보험 등을 통해 장수위험을 분산하는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즉각 도입하기보다 장수위험 측정에 필요한 경험통계와 가격산출 기반을 구축하고, 연금부채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및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역량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PRT 도입에 앞서 장수위험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부채이전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정년연장은 보험산업에 연금자산의 장기화를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DB형 중심의 기존 경쟁우위를 약화시키고 운용성과와 은퇴소득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경쟁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DB형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의존하는 기존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DC형·IRP의 장기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와 보증을 결합한 연금상품, 은퇴소득관리 및 장수위험 관리 등 보험 고유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적립금 유치'에서 '장기 운용-안정적 수령-장수위험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 보험산업 대응전략 요약

추진과제	핵심 내용	기대효과
장기 자산운용·운용관리 경쟁력 강화	실적배당형·생애주기 운용 확대, 글로벌 분산투자, 디지털 운용관리·자문 강화	DC·IRP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
하이브리드형 연금상품 확대	투자·보증 결합, 종신소득·부분인출·건강보장 연계	자산축적과 노후소득 보장의 결합
통합 은퇴소득관리체계 구축	퇴직·개인연금의 가입-운용-인출-연금화 통합관리	수령시장 경쟁력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장수위험 관리역량 강화	PRT·Buy-out·장수스왑의 중장기 검토, 위험측정·법제·자본관리 기반 구축	보험 고유의 장수위험 관리기능 강화

자료: 저자가 작성함